

UN 2030 'SDGs'의 의의와 이행방안 및 당면과제

'SDGs 이행대책 관민협의기구' 설치를 건의함

<UN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SDGs) 대응방안 대(對)정부 건의문>

2016년 7월 6일(수)

UN 한국SDSN<sup>1)</sup> 고위원탁회의

의 장 이흥구

대 표 양수길

본부장 김정규

1. 아시는 바와 같이 UN의 194 회원국 정부는 2015년 9월 25일 UN본부에서 개최된 정상회의에서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를 채택하고 2016년 1월 1일을 기해 동 의제의 이행에 착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 동 의제의 핵심은 세계 모든 나라가 힘을 모아 글로벌하게 달성해야 할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로서 의제 합의문은 각 SDG의 달성을 위한 구체적 국가별 행동의제로 평균 10개의 '세부목표(targets)', 총 169개의 표준적 세부목표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169개 세부목표들은 대내적 행동의제 112개, 개도국 지원 행동의제 38개 및 국제협력 의제 19개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3. 2030 의제는 지구의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인류사회의 공동번영 및 평화를 담보하기 위해서 ① 모든 나라가 지구환경의 보호에 책임감 있게 참여하고 ② 자국 국민 모두의 번영과 행복을 도모하고 ③ 나아가 선진국들이 빈곤개도국의 발전을 상호 협력 아래 적극 지원하는 **새로운 국가경영 패러다임으로 변환**을 공동으로 도모하기 위한 **공동된 행동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이행방안(정책적 전략과 대책, 평가체제 등)은 각국 고유의 여건에 따라 정부가 책임지고 수립·운영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4. 각 정부는 이제 국내적으로 ① 169개로 구성되는 표준 세부목표세트에 대응하는 자국 나름의 세부목표들을 설정해 2030년까지 달성할 목표수치를 부여하고 ② 동 목표치들의 정책적 이행 전략과 대책 즉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을 도출해, 추진해 나가면서 ③ 그 성과(progress)를 '지표(indicators)'에 입각해 지속적 계량적 범국민적 숙의적(熟議的)으로 '측정-평가'(follow-up and review)(이하 '평가')하고 정책을 조정해 나가야합니다.

1) **UN SDSN(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목적: 글로벌 차원에서 자연·사회과학 전문가들을 동원해 UN SDGs의 개발 및 이행 등 지속가능발전 문제들의 실질적 해결방안을 연구해 UN 및 각국 정부에 제시하면서 SDGs 이행을 지원하고 SDGs의 중요성을 공론화하고 청소년 SDGs 교육을 추진. **발족:** 2012년 8월 UN 반기문 사무총장이 발족시킴. **대표(Director):** 사무총장특별고문 Jeffrey Sachs Columbia대 교수. **사무국:** Columbia대 The Earth Institute. **회원기관:** 대학교, 연구기관, 기업체, 재단, 시민사회 조직 등 지속가능발전 관련 전문성을 갖추고 그 해법의 모색 및 이행에 상당한 역량을 투입할 용의가 있는 지식기관들. 글로벌하게 국가별 조직(**National Network**) 및 주요 지역별 네트워크로 구성. **국제전략이사회(Leadership Council):** 지속가능발전 문제 전문가 약 100인으로 구성. **UN 한국SDSN 발족:** 2013년 10월 14일 임의기구로 발족. **대표:** 양수길 UN SDSN 국제전략이사 겸 전(前)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2010~2012). **고위원탁회의:** 고위자문회의와 연구협의회의로 구성. **고위자문회의 의장:** 이흥구 전 국무총리. **연구협의회의 회장:** 대표. 본부: 고려대 오정에코리질리언스연구원(OJERI) 본부장: 김정규 OJERI원장. 홈페이지: [www.unsdsn.org](http://www.unsdsn.org)

5. 국제적으로는 SDGs의 이행에 대해 UN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고 매년 UN 고위정치포럼(HLPF) 차원의 각료급 글로벌 평가회의 및 4년 주기로 총회 차원 정상급 평가회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오는 7.11~20에 걸쳐 UN 경제사회협의회(ECOSOC) 주최로 제1차 연례적 SDGs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HLPF가 개최됩니다. 여기에서 22개국이 '자발적 국가평가'를 실시하고 한국도 그 중 하나로 참여합니다.
6. SDGs에의 대응과 관련해서 정부는 개도국 지원 사업을 강조해왔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이 20세기 후반에 성공적으로 빈곤을 탈피하고 선진공업국으로 도약하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경험과 그 성과를 바탕으로 개도국들의 빈곤 탈피 및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정부의 개도국 지원 중시를 적극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그러나 이와 아울러 저희는 2030 의제 합의문이 천명하는 바와 같이 SDGs가 '보편적'인(universal) 행동의제이라는 점을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OECD 회원국들을 포함하는 세계 모든 나라가 각기 국가경영을 혁신함으로써 글로벌 패러다임을 '변환시키자'(transform)는 의제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SDGs는 대한민국에게도 매우 시의적절한 의제입니다. 개발지원은 이러한 의제의 한 부분입니다.
7. SDGs는 “권력과 물질에 대한 이기적이고 무절제한 욕심으로 지구의 한정된 자연과 자원을 남용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소외시키는”(프란시스코 교황, 2015.9.25. UN연설) 경제성장 우선의 전통적 국가경영 방식에 대한 반성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이러한 패러다임으로 누적되어 온 여러 가지 부작용과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sup>2)</sup>.
  - 이산화탄소 배출 의존도 높은 산업구조, OECD권 최악 수준의 대기오염, OECD권내 가장 여성차별적인 사회구조로 인한 '출산파업' 및 이로 인한 최고속 고령화, 창의성을 억누르는 수직적 교육, 산업과 노동시장 등 경제 각 부문 내 불평등의 구조화, 사회적 상향이동성의 저하, 대기업 경영주들과 부유층의 사회적 책임의식 결핍, OECD 최하위권의 사회적 연대감, 취약한 사회복지제도, 정부 실패의 빈발, 정치의 비효율성, 경제성장 잠재력의 지속적 약화, 젊은 세대 간 만연한 절망 등이 대한민국의 지속적 발전을 위협하는 주요 위기 요인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체계적 효과적 대책 없이는 통일이 오더라도 '대박'이 되기보다는 그 자체가 큰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8. SDGs는 이러한 각국의 위기요인들이 경제, 사회, 환경, 협치(協治)의 제(諸) 부문에 걸치면서 원인적 측면에서 상호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음에 주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이들 문제들을 ① 개별적으로 처방하기보다는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나아가 SDGs는 “아무도 낙오시키지 말자”는 것을 대원칙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통합적 의제로서의 SDGs의 다면성과 다부문성, 그리고 '아무도 낙오시키지 말자'의 대원칙을 이행하고 동시에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주도하되 각급 지자체, 기업, 각 이해관계자들, 시민사회, 의회 등과 자연·사회과학분야의 전문가들에게 개방되고 모두 참여할 수 있는 ② SDGs 이행에 대한 범정부적, 범사회

2) UN SDSN, 한국SDSN 및 고려대 OJERI 공동주최 'UN 2030 SDGs의 국가협치에 대한 의의와 대응 과제' 토론회(2016. 6. 13, 서울 프레스센터) 내용 참조.

적 민주적 협의과정 즉 범국민적 ‘협치 체제’가 운영되어야한다고 제안합니다. 나아가 이들 여러 가지 위기 요인들이 특정 정권 임기 내에, 혹은 단기적으로 해소되기 어렵기에 ③ 15년에 걸친 중장기적이고 점진적이며 꾸준한 접근을 제시합니다. 정권별로 우선순위 과제에 치중하더라도 균형을 잡는 종합적 점검과 보완을 권고합니다.

저희 ‘UN 한국SDSN’ 참여자들은 고위원탁회의 위원들은 한국이 상호 긴밀히 연관된 이들 국내적 위기로인들을 통합적 체계적으로 해소하고 국제적 위기로인들의 해소에도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이 협력해 2030 UN SDGs를 적극 운용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SDGs를 기제(機制)로 삼아 위의 제4항에 부합되게 국정 부문별 기존의 목표와 정책들 및 그 추진전략을 점검, 보완, 정비하면서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정부는 외교부의 주관으로 7.11~20 UN HLPF 참가를 위해 ‘자발적 국가평가보고서’(“From a Model of Development from Success to a Vis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초안(2016.6)을 준비했습니다. 동 초안은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2016~2035)과 제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2016~2020) 및 SDGs와 관련되는 기존의 각종 부문별 정책들과 정책협의 체제를 훌륭하게 종합 정리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초안에서도 지적되는 바와 같이 이들 두 기본계획과 부문별 정책들은 2030 SDGs의 출범 이전에 수립된 것들로서 새로이 출범한 SDGs 체제에 맞추어, 특히 SDGs가 새로이 제시하는 위의 제8항의 세 가지 원칙에 부합되도록 점검, 보완,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SDGs의 이행을 점검, 평가, 조정하는 범부처적 기제(機制)가 도입되어야합니다.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 직속기구로 ‘지속가능발전(SDGs) 위원회’(가칭)가 설치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를 보완하고 지원하는 범국민적 이행평가 참여체제가 구축되어야합니다. 범국민적 협치 체제가 정비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SDGs 이행추진 업무를 관장해야 할 책임 소재가 부처 간에 애매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가 지속가능발전법(2010.1.13. 타법개정, 2010.4.14. 시행)에 의해 환경부 및 환경부장관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책임아래 있으나 이 체제가 국정개혁혁신을 추구하는 새로운 SDGs의 이행에 부적합합니다. 정작 동 업무를 관장해야 할 국무조정실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2010.1.13. 2010.4.14. 시행)에 의해 녹색성장 관련 업무에 치중하면서 총리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HLPF 대비 ‘자발적 국가평가보고서’ 초안은 외교부(개발협력국)의 주도로 작성되었습니다. 책임소재를 명확화하고 특히 국무조정실이 SDGs 이행 추진업무를 책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의 국무총리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 장관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통폐합되고 이를 위해 녹색성장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구성되는 유관 법령체계가 개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령체계 개편에 앞서 새로운 법령들에 담을 SDGs 이행 대책이 연구, 공론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령 개편을 내년으로 미루고 이에 앞서 향후 1년간 SDGs 이행대책의 연구, 공론화를 위한 범국가적 ‘SDGs 이행 대책 국민협의기구’를 청와대 혹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한시적으로 설치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조속히 착수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끝)